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취약계층 경제적 기초보장…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30%→35%〉 〈46%→50%〉

윤석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보강

기초 생활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대상과 급여 수준 확대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검토
연내 주거 복지혁신 방안 마련 방침
고용보험, 개인별 소득기반 개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 완화를 검토 중이다. 급지 구분 방식 등의 변경·확대와 같이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 추진한다.

긴급복지는 생계지원금을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 153만6324원) 수준까지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완화 내용으로는 실거주 주택을 재산기준에서 공제, 가구원 수를 고려한 금융재산 기준 인상이다.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된다. 1차적으로 시범사업 모형을 다양화해, 그 결과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범위·한도를 확대한다. 선정 기준 중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소득의 15% 초과 항목이 10% 초과로 개선됐다. 지원 범위 역시 6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며, 지원한도는 1인당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승했다.

고용보험은 개인별 소득기반으로 개편한다. 개편 내용은 소득파악체계 고도화 지속 추진,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의 및 연구용역 추진 등이 있다.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충

장애인 연대는 얼마 전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갔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지속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지원에 집중했다.

장애인 이동편 증진을 위해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특별교통수단(23년까지 5000대)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시범사업(~'24년) 중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 평가 후 확대 ▲소득·고용 보장 강화 ▲장애인 건강 지원 확대 ▲장애아 양육지원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 기초연금 개편·확대 및 노후소득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보호 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기준 현재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3%로 확대, 중위소득별 지원금 지급 추진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부양 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및 유공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제한(현 75세)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약자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내놓았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기초연금 개편 등 사회 약자층 배려
공공임대주택 공급 내년 세부방안

이밖에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맞춤형 복지 기반의 '주거 복지혁신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질적 수준을 제고한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추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세부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투자 확대 *법인세·배당소득과제 등 부담 완화*

-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최고세율 인하 (25→22%)
- 배당소득과세: 유보소득배당 이중과세 조정 확대

주거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공급 확대
-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 마련 (6월)
-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3분기)

세제 개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1년),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1→2년으로 확대
- 보유세 부담 경감방안 보완
-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60→45%)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조정(100→60%), 한시적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상속 주택 등 주택수 산정 제외
-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 정부안 확정 (7월)

금융 지원
- 생애최초 LTV 완화(80%), 대출한도 확대(6억원)
-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 개선(3분기)
-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 등 규제 보완
-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 시행

전월세 시장 안정화
- 건설형 공공임대(약 3만호), 매입임대(약 1만호), 전세임대(약 2만호)
- 계약갱신청구권 도래 이전 전월세 시장 선제 대응방안 마련

/기획재정부·뉴시스그래픽

올해 경제성장률 2.6%로 하향 조정… 물가상승률 4.7% 전망

수출 둔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 반영
15세~64세까지 고용률 68% 예상

〈尹정부 2022년 韓경제 전망〉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당초	수정	
경제성장률(%)	4.1	3.1	2.6	2.5
취업자증감(만명)	37	28	60	15
소비자물가(%)	2.5	2.2	4.7	3
경상수지(억불)	883	800	450	560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는 급속히 악화된 대외여건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2%에서 4.7%로 오를 것으로 보고 정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으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봤으나, 글로벌 성장·교역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받고 투자 회복 속도도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하향 조정된 경제성장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난 8일 내놓은 하향 조정치인 2.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OECD는 지난해 12월엔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측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5%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수정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 경제가 2.8% 성장할 것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방역조치 해제 이후 대면서비스업이 빠르게 반등함과 동시에 해외여행 재개, 추경 효과, 고용·소득 여건 등으로 올해 민간소비가 연간 3.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수출은 올해 11.0%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수출은 25.7% 증가한 바 있다. 전반기엔 서버용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석유제품·신산업 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엔 주요 수출국 성장세가 약화되고 공급 차질에 따른 교역 둔화가 나타나 수출 증가세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3.0%)와 건설투자(-1.5%)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공급망 차질과 더딘 세계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이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건설투자는 공급 문제 차질이 해소되느냐가 핵심인 가운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설비투자와 설비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망 문제 해소와 업황 개선으로 인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와 국내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며 올해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두바이산 원유는 올해 1분기 배럴 당 95.14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5% 상승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하는 곡물가격지수는 지난 5월 157.4%를 기록해 2년 전에 비해 77.0%가 올랐다.

통계청 국가포털통계(KOSIS)에 따르면 외식을 포함한 전체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2월(5.4%)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정부는 또한 올해 취업자 수의 경우 6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초 기저 영향,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비대면 일자리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났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방역 인력 축소, 올해 4분기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봤다.

이밖에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로 올해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 전망치는 68.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고용률인 66.5%보다 1.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3.1%로 지난해 실업률인 3.7%보다 낮게 내다봤다.

/박태홍 기자 pth7285@